

여야, 초당적 협력보단 갈등 심화... 국정안정협의체까지 분열

거부권 행사 등 이견에 '신경전'

우원식, 내란·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
與,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압박
野, 거부권 행사 시 탄핵 가능성 제기
오늘 권성동·이재명 대표 예방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탄핵소추단, 초당적 국정안정 협의체 등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내란 일반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두 개의 법률안과 농업 4법 개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거부권을 쓰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했다.

추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으면 거부권 행사 권한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민주당

이 답을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례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박범계, 이춘석, 이성운,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합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1명이다. 이외 나머지 탄핵소추위원단은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위원일뿐, 나머지는 탄핵소추위원단들은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역할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을 내란죄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마치 계엄 선포와 해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 짓게 발의했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 당론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 협의체도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 위원회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이 대표를 예방한다. 얽히고 설킨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을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단순한 인사나 덕담을 주고 받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덕수 권한대행 "새해 첫날 예산 즉시 집행... 상반기 재원 총동원"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국무회의

양곡관리법 등 6개법안 상정 보류
국회-여야 소통 통해 해결책 모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줄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및 직무정지 이후 처음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등 6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기한이 남아있는 한 국회와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동의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

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일관된 정책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장관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줬으면 한다"며 "민생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변함없다는 점 등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단통법 폐지·AI 기본법 통과...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 심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인공지능 정의·윤리 원칙 등 규정
교사 반대·학습 저하 우려에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AI(인공지능) 기본법을 통과했다. 또한,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의해 본회의로 넘겼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이외의 보조금 지원을 금지시킨 것이 핵심이다. 일부 소비자만 이른바 할인폭이 큰 '성지'에 찾아가 차별적인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추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비자가 기기를 더 비싸게 구매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단통법 폐지는 4·10 총선 공표공약이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삶의 필수 조건이 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것이 골자다.

이날 함께 통과된 AI 기본법은 인공지

능 정의 규정,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정기적 인공지능 기본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상품·서비스 사업자의 사전 고지 등을 담아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규제에 관한 기초 내용을 담았다.

AI 기본법의 경우 정청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발언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행위에 관계된 인공지능 개발 활용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법안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사위에 올라가게 돼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가운데 호소를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이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도 소통했다"며 "오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리해서 문체부와 이견이 해소됐다고 통지받고 말씀드린 상황이다"라고 했다. 유 장

관은 "문체부 국장이 위계를 안 맞추는 것 같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다시 묻자 정 국장은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는데, 공개 대상이 아닌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왜 공개해야 하나"라고 묻자 정 국장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학습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해서 창작자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며 "AI업계도 국제적 규범에 따라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가 있어서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보면서 후속 입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제정법에는 모든 걸 담아서 하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진다. 이외 사항은 후속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과방위 입장"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일단 제정법을 통과시키고 미진하거나 부족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 법은 개발차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미 여러번 문체부의 입장은 저작권법 개정 추진이었다.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기에 때문에 기본법에선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문체부뿐 아니라 개보위 등 규제 관련해서 차후 각 부처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본 내용인데 안타깝다. 국장의 의견이 너무 강하다"라고 했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끝에 처리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교사들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 ▲AI교과서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교육현장 혼란 ▲문해력 저하로 인한 학습성과 저하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4000억원 달하는 대규모 예산으로 대규모 연수 ▲수동적 교육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전환 ▲교육자료로 지정할 경우, 채택 여부에 따라 격차 증대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